

“누군가 더 숨지기 전에”

전국서 스토킹·교제살인 잇따라 대전경찰 고위협군 전수조사 추진 위험성 확인땐 강력대응 나서기로

〈속보〉=대전을 비롯해 경기 의정부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이에 따른 교제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고위협 대상자를 전수조사해 강력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본보 31일자 6면 등 보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고 접근금지 조치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를 지켜내지 못했다.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위협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 우선 스토킹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전수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취해진 대상자는 3043명이다.

경찰은 내달까지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가적인 위험성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 신청 등 실효성 있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유 대행은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교제 폭력은 교제 살인이라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 1회 모니터링과 민간 경호 등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병행하겠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접근금지 대상자의 주거지 주변엔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해 위력순찰과 거점 운영 등으로 가해자의 재범 심리를 차단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스마트위치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치는 피해자의 일상을 제약하면서 안전 확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순찰·불심검문을 통해 재범 심리를 차단한다는 거다. 이를 위해 ‘스토킹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분석 도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피의자

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해 구속영장 신청 시 반영하고 검찰·법원과도 정보를 공유해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유 대행은 “교제 폭력의 경우 현행 범상 접근금지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입법적 보안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교제 살인 등을 언급하며 “황당하다.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라고 주문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선화지주택비대위원회가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금 흐름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선화지주택비대위원회 제공

조합원 돈 1523억은 어디로...

선화지역주택조합원 비대위 구성 “돈 납부했는데 아파트부지 경매행 조합장 자금흐름 밝히고 퇴진하라”

대전 중구 선화동 일대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설립된 선화지역주택조합이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자금의 흐름을 밝히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다. 이들은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선화지주택비대위는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만 믿고 기다린 지 4년이지만 대출금 연체, 대전시와의 마찰, 토지 매도인과의 갈등

이 이어지며 결국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조합 부도산에 대해 경매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은 총회 개회를 통해 조합장의 의견을 듣고 싶었지만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회를 열 수 없다’라는 조합을 명분으로 총회 개회를 요구하는 조합원의 요구는 무시되고 있다. 공중에 사라지게 생긴 돈은 무려 1523억 원이다”라고 토로했다.

김영민 선화지역주택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조합원은 적게는 수천만 원씩,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아 조합에 납부했고 1523억

원에 달하는 데도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가 없다. 조합원이 낸 피 같은 돈은 토지매입에 단 한푼도 쓰이지 않았고 아파트 부지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했다.

조합 설립인가 당시 중구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도 냈다. 이들은 “선화지주택 설립 당시 박 의원이 인가를 최종 승인했다. 공적 권한을 행사해 선화지주택이 출범할 수 있도록 했기에 책임이 없지 않다. 책임이 가장 큰 조합장은 전면 퇴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대청호 문의수역 조류경보 ‘관심’

대청호 문의 수역에 31일 오후 3시를 기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다. 문의 지점의 유해납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발령 기준인 ml 당 1000세포를 2주 연속 초과했기 때문이다. 강우로 인해 댐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된 상태에서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 일사량도 많아져 유해납조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남수역은 지난 28일 ml 당 4705세포를 기록, 내주에도 ml 당 1000세포를 넘기면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진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중구통 이달 한달간 10% 인센티브

대전 중구가 이달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중구통(通)’의 인센티브를 10%로 상향한다. 구는 지난 7월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5%까지 조정했는데 이로 인한 높은 사용률을 보이며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향 조정을 결정했다. 인센티브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중구통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음식점, 마트, 미용실 등 637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근우 수습기자 gnu@ggilbo.com

도시철도 화재안전관리대책 추진

대전소방본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이달부터 내달까지 집중 추진한다. 대책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22개 역사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수립했다. 대책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 안전 컨설팅, 소방서장 주관 지하 역사 합동점검, 화재 발생 시 실전형 훈련 등이 포함된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욕실에 불성실한 수업까지 서산교육청 초등교사 고발

학부모 국민신문고 제보로 알려져 해당교사 “그런 일 없다” 전면부인

충남 서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0대 여교사가 불성실한 수업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수개월에 걸쳐 욕설 폭언 등 학대를 한 혐의로 교육당국에 의해 고발을 당했다.

31일 서산교육청에 따르면 A 교사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수업 중 학생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불성실하게 수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과 교장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알린 학생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40분 수업 중 10~25분 정도만 수업을 진행하고 5·6교시는 거의 매일 영화나 드라마 시청 또는 외부 강사 초청 강의로 이뤄졌다는 게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학부모들은 또 A 교사가 이동수업이나 급식시간 생활지도 역시 이행하지 않았고 수업에 불참하거나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공놀이를 해도 전혀 제재하지 않았고 학생들과 대화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자주 사용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을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서산교육청은 지난 14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부모의 민원을 통보 받고 이를 뒤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후 장학사 2명과 전문상담교사 4명을 투입, 조사를 진행하던 중 A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지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교육종사자는 아동학대 문제를 인지할 경우 사실 여부를 떠나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A 교사에 대한 혐의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A 교사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윤기창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체육시설 이용료 최대 15만원 지원

상품권 70만장 제로페이로 지급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70만 장을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8월 말 1차 지원 대상을 선정,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품권 1장당 5만 원으로 지자체별 신청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상품권은 제로페이를 통해 지급되며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모든 스포츠시설에서 사

용할 수 있다. 현재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은 전국 약 4만 3000여 개로 문체부는 각 지역의 수영장,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공공체육시설로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어르신의 쉽고 편리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신청 기간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로 접수 상황을 고려해 10월 중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상품권 신청은 전용 누리집(ssvoucher.co.kr)에서 할 수 있으며 1차 지원 대상은 8월 말 선정될 예정이다. 1차로 지원받은 상품권은 9월부터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사용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이기준 기자 lji@ggilbo.com

벌쏘임·뱀물림 7~9월 집중... 야외활동시 보호장비 필수

5년간 521명 입원·18명 사망

질병관리청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최근 5년간(2000년~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에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분석에 따르면 벌쏘임 사고는 3664건이 발생해 88명이 입원하고 13명이 사망했다. 70.5%가 7~9월 사이에 발생했으며 특히 낮 12시~오후 6시 사이 낮 시간대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주말(47%)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쏘임 환자는 남자(64.4%)가 많았으며 연령대는 60대(25.8%), 50대(22.1%)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벌쏘임 사고는 주로 일상생활 중(37.2%), 여가 활동(24.3%), 업무(20.0%) 중에 많이 발생했으며 0~30대까지는 휴식, 누워 있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등산과 같은 여가활동 중 발생한 비율이 높고 40대 이후부터 일

상생활 다음으로 업무 중(벌초, 제조 등) 쏘이는 경우가 많았다. 발생 장소는 야외·강·바다(37.5%), 도로(18.8%), 집(16.1%), 농장 및 1차 산업장(9.6%) 등이었다. 쏘임 부위는 손(25.5%), 팔(17.6%), 얼굴(13.5%), 다리(12.2%) 순으로 나타났다.

뱀물림 사고는 최근 5년간 726건 발생해 433명이 입원하고 5명이 숨졌다. 9월(24.0%)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8월(16.8%), 7월(16.3%) 등이 뒤를 이었다.

주말(40.8%)에 많이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60대(28.9%)와 70대 이상(24.0%), 50대(19.6%)가 전체의 72.5%를 차지했다. 제조·농작물 수확 등 업무 중 사고가 27.3%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24.2%), 참고 정리·분리수거 등 무보수 업무(22.9%) 순이었다. 물린 부위는 손(60.6%), 발(20.9%), 다리(9.3%) 등이었다. 뱀물림 사고는 특히 입원 비율이 59.6%로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박동규 기자